

## 취약계층 '희망' 반토막

대체사업 없이 내년 희망근로 60% 축소

내달부터 사업 일시 종단... "겨우살이 어떡하나"

내년 희망근로사업 규모가 올해보다 60%나 축소될 것으로 보여 사업대상에서 탈락하게 될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6개월이었던 사업 기간 내년에는 4개월로 줄여 정부가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추진해왔던 '희망근로 사업'이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용두사미'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희망근로사업은 애초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농도 특성상 농번기 동안 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등 업무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이달 말 또는 12월 중순께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부터 다시 시작돼 6월 중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 광주·전남 희망근로 사업 규모는 올해의 4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원 대상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올해 7천500명을 대상으

로 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했으나, 내년에는 3천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비도 올해 512억원에서 200억원대로 산감된다.

전남도 내 희망근로사업에는 개인적 사유 등으로 참여를 중도 포기한 1천874명을 제외한 1만188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4천여 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장 희망근로 사업이 중단되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 사이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단순노동직 같은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거울철을 앞둔데다 난방비 등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여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처음부터 희망근로사업 취지가 경제 위기에 따른 한시적 사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행안부 차원에서 계속 사업규모를 줄일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기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겨울철 대체 사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저농약 농산물 인증 내년부터 중단

## 전남 친환경 농업 타격 불가피

내년부터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인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업에 진출하려는 전남지역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정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4일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신규 인증을 중단키로 했다. 다만, 기존에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2015년까지 종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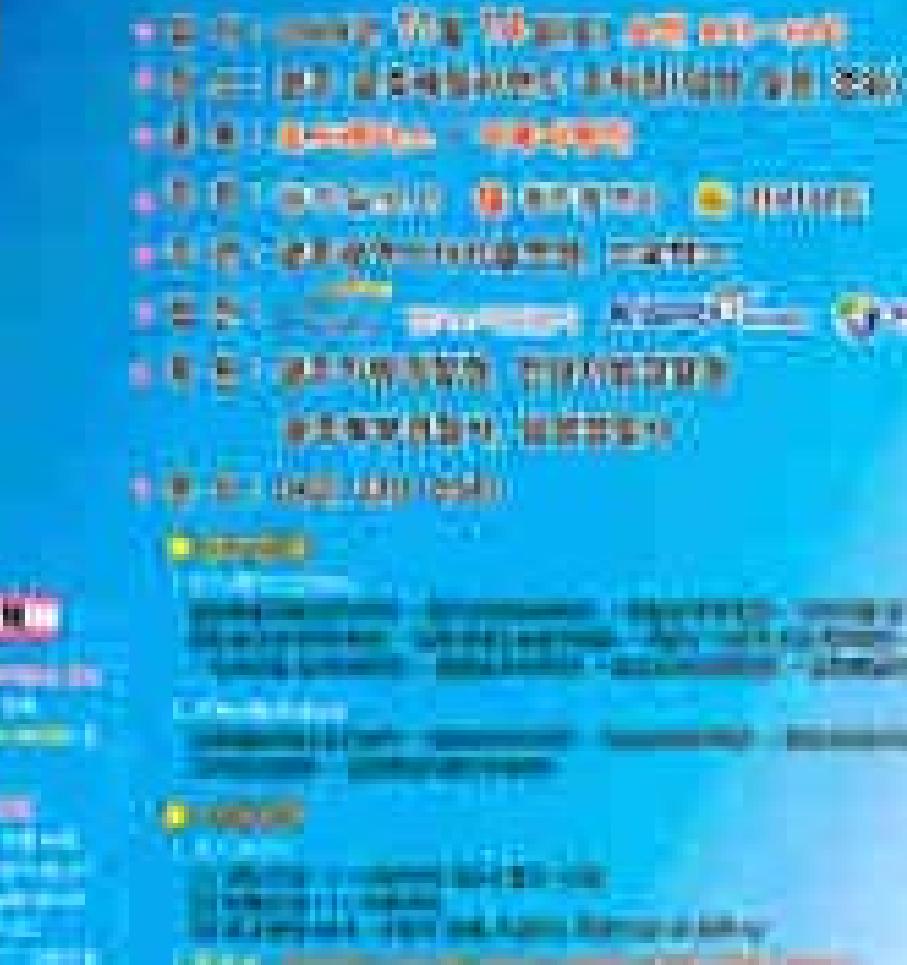
기준을 지킬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뒀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친환경 직불금 등의 국고 보조금과 단지조성사업비 등 지방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저농약 인증은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한 첫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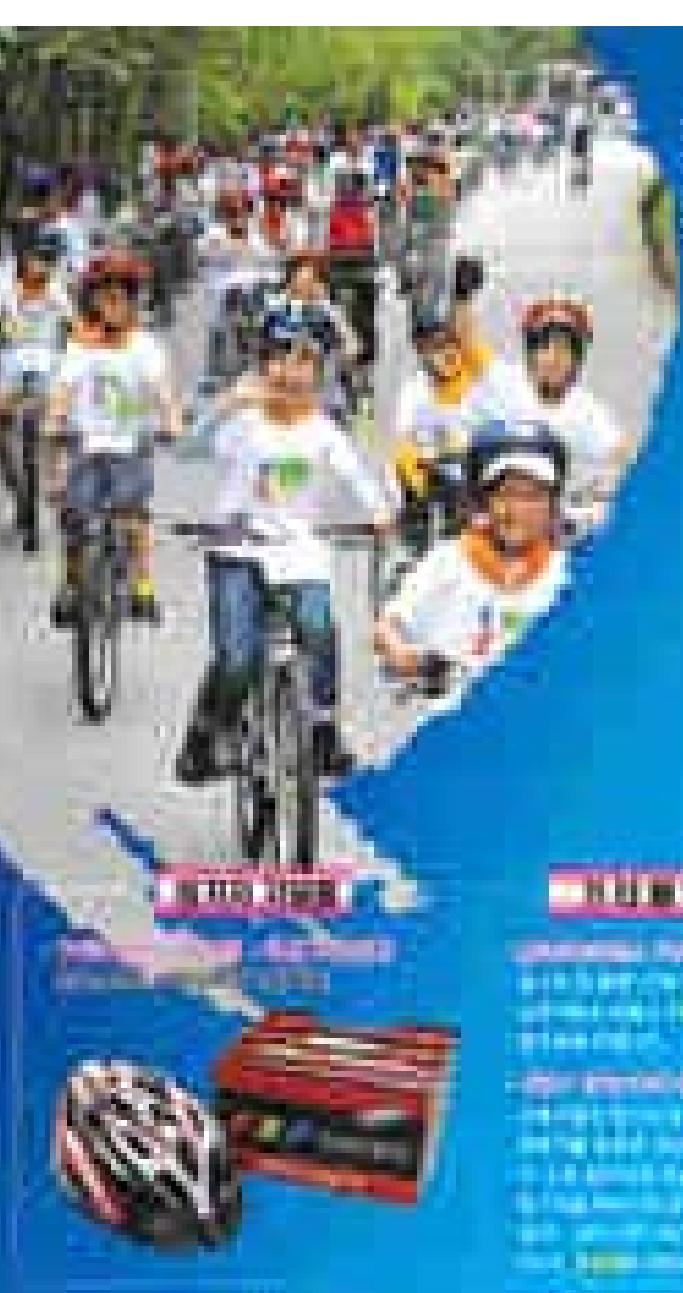
여서 땅의 지력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필수적이다.

저농약 인증을 받게 되면 논과밭의 경우 ha 당 국고보조금인 친환경 직불금이 각각 25만4천 원과 52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단지조성사업비

## 2009 Green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http://like.kjmedia.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은병수 예술총감독 인터뷰 ▶12면

## 신종플루 학교 휴업 결정권

## 지자체장서 다시 교육당국으로

신종플루 확산을 막고자 법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학교 휴업을 결정하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다시 교육당국으로 변경했다. <관련기사 7면>

중대본은 지난 4일 첫 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 군수)이 관내 학교장, 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공동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본은 5일 다시 보도자료를 내 "지역대책본부장이 휴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충분히 협의

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 교육장 등 교육당국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대한 휴업 결정권을 교육청·학교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옮겼다가 당초 방침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질병관리본부의 '학교 예방접종 행정지원사이트'가 5일 오전부터 접속 폭주로 자주 끊겨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2009 Green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